

원전 '사용후 핵연료' 처리 국민 의견 수렴 착수

〈원자력 발전과정 배출되는 고준위 폐기물〉

공론화위 공식 출범... 원전주민대표 등 13명 선정

2016년 저장시설 포화상태... 처리 방식 집중 논의

원자력발전 과정에서 배출되는 고준위 폐기물인 '사용후 핵연료' 처리 방안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 작업이 본격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서울 JW 메리어트호텔에서 '사용후 핵연료 공론화위원회' 출범식을 했다.

공론화위원회 출범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4년 국민적 공감대 아래 사용후 핵연료 관리 방안을 수립하겠다는 정책 방향이 설정된 이래 9년 만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가적 현안을 해결하고자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 국민의견 수렴 절차를 시작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공론화위원회는 홍두승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를 위원장으로 인문사회·기술공학 분야 전문가 6명, 원전 지역 주민대표 5명, 시민사회단체 대표 1명 등 13명으로 이뤄졌다.

인문사회·기술공학 전문가로는 정진승 APEC기후센터소장, 송하중 경희대 행정학과 교수, 김창섭 가천대 에너지IT학과 교수, 김은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 박순애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조성경 명지대 자연교양학과 교수가 선정됐다.

원전지역 주민대표에는 백태환

경주시의회 의원, 최길영·송재원 울주군의회 의원, 김대균 기장군의회 의원, 하선중 한빛원전 민간환경안전감사위원회 위원이 들어갔고, 시민사회단체 인사로는 김연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장이 이름을 올렸다.

공론화위원회는 애초 15명으로 추진했으나 시민사회단체 추천 위원으로 선정된 윤기문 녹색연합 사무처장,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처장이 위원회 구성에 이의를 제기하며 불참을 선언했다.

위원회는 내년 말까지 정부에 권고안을 제출하고 정부는 이를 토대로 종합 관리 대책을 수립하게 된다.

사용후 핵연료는 준·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에 비해 방사선과 열이 매우 강해 진작부터 안전 관리 문제가 제기됐지만 원전 폐기 문제와 맞물려 격렬한 사회적 논쟁을 부를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선뜻 공론화되지 못했다.

현재 전국 23기 원전에서 매년 700t 이상 배출되는 사용후 핵연료를 각 원전의 임시저장시설에 보관하고 있지만 가장 오래된 고리원전 1호기를 시작으로 2016년부터 차례로 임시저장시설이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임시방편으로 시설 확충을 통해

2024년까지는 포화 시기를 지연시킬 수 있지만 그 이후는 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공론화 시기를 더는 늦출 수 없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공론화위원회에서는 사용후 핵연료의 처리 방식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용후 핵연료 처리에는 ▲사용후 핵연료 속에 있는 플루토늄 등의 물질을 재처리하는 방식 ▲지하 깊은 곳에 묻는 '영구처분' 방식 ▲영구처분 전까지 지상에 보관하는 '중간저장' 방식 등이 있다.

이 가운데 재처리 방식은 한·미일 자력협정 조항에 묶여 사실상 불가능하고 영구처분의 경우 기술적 문제 등으로 어려움이 예상돼 결국 중간저장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논의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부지 선정 문제에 대해서는 필요한 검토 사항만 제시하기로 해 구체적인 논의는 정부 차원에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사용후 핵연료 = 원자로의 연료로 사용된 핵연료물질 또는 다른 방법으로 핵분열시킨 핵연료물질이다. 경북 경주 방폐장에 보관된 준·저준위 방사성폐기물보다 방사선과 열이 훨씬 강해 현행법상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로 분류된다. 우라늄과 플루토늄 등 핵분열 물질을 포함하고 있다. 준·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은 원전에서 사용된 작업복, 장갑, 폐필터 등이 있다.

사용후 핵처리 관리 개념도



사용후 핵연료 종류	한국표준형 연료 (경수로)	CANDU형 연료 (중수로)
우라늄-235 농축도(%)	2~5	천연우라늄(0.7%)
연료봉 수(개)	236	37
길이(cm)	약 453	약 50
중량(kg)	약 430	약 19
적용 원전	고리·신고리 6기, 한빛 6기, 한울 6기, 신월성 1기	월성 4기
형태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연원뉴스

한빛 1호기 재가동 승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8월 28일부터 정기검사(계획예방정비)를 해온 원자력발전소 한빛1호기를 재가동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30일 밝혔다.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서에서 시설 성능분야 92개 항목을 검사했으며 임계(가동) 전까지 시행한 검사결과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성능과 운영에 관한 기술기준'을 만족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부품의 시험성적서 확인이 어려워 정기검사서에서 교체하기로 했던 11개 품목 30개 부품도 전량 교체한 것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원안위는 원자로를 재가동한 이후에도 절차에 따라 출력상승 시험과 저압 터빈 진동 측정 검사를 벌일 계획이다.

국정원 등 대선개입 의혹 시민단체, 특검도입 촉구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불법적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 광주·전남 시민사회단체 및 대학생들의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국정원·군·보훈처 등의 대선 개입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다시 불붙는 모양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30일 광주 동구 충장로 광주우체국 앞에서 '국가기관의 불법적 대선 개입 사건 해결 촉구 광주시민 청원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을 해소하고 특별 감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1C 광주전남대학생연합도 다음달 2일 오후 5시 광주우체국 앞에서 '국정원 광주·전남 비하 댓글 및 대선개입 규탄 광주·전남 대학생 진격의 날' 행사를 갖는다. /김홍희기자 kimyh@

국정원 대안학교 사찰의혹 파문 확산

광주·전남 대안학교, 교육연대 등 진상규명·사과 촉구

국정원의 대안학교 사찰의혹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사찰의혹을 제기한 민주당 장하나 의원과 광주·전남 대안학교, 대안교육 연대 등이 30일 국정원의 사찰의혹 진상규명과 사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국정원의 대안학교 사찰의혹 당사자인 광주·전남 지역 대안학교인 늦봄문리화학교 이송요 교장과 지혜학교 장종택 교장, 대안교육연대 김희동 운영위원장, 대안교육부모연대 전재철 대표 등은 이날 국회 정문관에 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정보원이

교 교사에 대해 국정원이 불법사찰을 한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라며 "국정원 본연의 업무에서 벗어난 불법 행위를 왜 했는지, 무슨 목적으로 신상 정보를 파악했는지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국정원 민간단체 의혹을 폭로한 장하나 민주당 의원은 "국정원의 광범위한 민간인 사찰에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이 활용되고 그곳의 국민 개개인의 모든 정보가 국정원에 제공되고 있다"고 우려하며 "국정원개혁특위가 구성되면 반드시 이런 문제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또 하나의 불법행위를 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강하게 규탄했다. 대안학교 측은 "국정원이 광주지역 방과후노동청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사건 수사'라는 명분으로 업무협조를 요구한 것은 모든 대안학교 구성원들을 범죄자 취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정원은 합당한 진상조사와 성의 있는 해명 그리고 진심이 담긴 사과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안학교의 연대모임인 대안교육연대와 대안교육부모 연대도 이날 성명을 통해 "범죄혐의가 없는 대안학

"재향군인회도 트위터 대선개입 의혹"

김기식 의원 주장

향군 "개입사실 없다"

재향군인회도 지난 대선 때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 소속 민주당 김기식 의원은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가보훈처의 지원단체로 정치활동이 금지된 재향군인회(향군)가 지난 대선 때 박근혜 후보 선대위와 직접 연루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활동을 통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향군이 지난해 청년국을 창설해 청년국 공식트위터로 작년 11월6일 박근혜 후보 선대위 청년본부였던 '빨간운동화' 회원 모집 공고를 했다"며 "향군 청년국이 작년 12월 대선후보 TV토론 직후 공식트위터를 통해 민주당 문제를, 통합진보당이 정회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수차례 남기는 등 SNS활동을 통해 대

선에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청년국 SNS 담당과장들의 페이스북 확인 결과 이들이 박 후보 선대위 청년본부 '빨간운동화'와 새누리당 선대위 SNS 서포터스 모임인 '빨간 마우스'의 회원이었다"며 향군 청년국 일부 실무진이 박 후보 선대위에서 활동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향군은 입장자료를 내고 "향군은 대선에 개입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반박하면서 "향군 청년국은 작년 4월 취임한 현 회장이 회원들의 노령화 극복을 위해 6월 중순 준비위원을 임명하고 7월 중순 이사회에서 정식으로 추진발아 신선했다"고 반박했다.

향군은 "당시 청년국은 여러 개의 SNS 계정을 운영했기에 향군 트위터에 새누리당 '빨간운동화' 모집공고가 게재된 사실조차 몰랐고, '빨간운동화·빨간마우스'에 회원 가입했다고 보도된 사실의 과정은 회원들이 정회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수차례 남기는 등 SNS활동을 통해 대

"여수땅 은퇴 대비 구입... 투기 의도 없다"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는 30일 부동산 투기 의혹이 일고 있는 여수지역 땅에 대해 "은퇴 후 살 목적으로 구입했으며 투기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여수 지역 부동산은 순천지청 근무 당시 직원들의 권유로 매입한 것으로 당시 매입 자금을 300만~400만원 가량을 직원에게 보내 구입한 것으로 기억한다"면서 "초일 근무지였던 여수·순천 지역에 대한 인상이 좋아 은퇴 후에 살고 싶다는 생각에 구입했다"고 청문회 준비단 관계자를 통해 밝혔다.

김 후보자는 해당 토지의 현재 기준 가액을 3200만원 가량으로 신고했다.

김 후보자는 "투기 의도는 없었지만 보다 세밀하게 살펴지 못한 건 불찰"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부인이 보유한 광양시 소재 부동산에 대해서는 "1989년 1월 장인이 물려가셨는데 이후 장모와 처남이 상의해 조금씩 등으로 해당 땅을 배우자에게 구입해준 것"이라며 "사업을 하던 처남이 당시 광양과 포함 등지에서 공장 이전지를 몰래하던 중 자기 명의로 여동생 명의로 3필지의 땅을 샀다"고 밝혔다.

/연원뉴스

'사회적 경제 지방의원 협의회' 창립

상임대표에 문상필

전국 지방의원들이 모여 30일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전국 사회적 경제 지방의원 협의회'(이하 협의회)를 창립했다. 협의회는 이날 오후 1시 서울시청에서 창립대회를 열고, 전국 지방의원 간 연대와 협력을 통해 사회적 경제의 정착과 발전, 활성화로 지역공동체 복원과 사회안전망 구축을 해나간다고 다짐했다. 협의회는 출범 후 국회 사회적 경제 연구포럼, 전국 사회연대경제지방정부 협의회와 연합해 '사회적 경제 기본법'

제정을 촉구하고 '2014 지방선거 사회적 경제 공약집'도 만들 계획이다. 협의회는 문상필

광주시의원(사민)의 주도로 지난 7월 온라인 모임을 시작해 지난달 13일 창립준비위원회를 발족했다. 협의회에는 421명의 지방의원이 가입했다. 협의회 상임대표는 문상필 광주시의원이 맡고, 공동대표단으로 광역대표에 김종욱 서울시의원 등 7명, 기초대표에 이동영 서울 광과구의원 등 7명이 맡는다. /최권길기자 cki@

나주 혁신도시 · 강변도시 남다른 부동산 투자법!

매물을 팔려는데!? 매물을 사려는데!?

고객 여러분의 고민을 **솔로몬 부동산**이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상업용지 / 근생용지 / 점포주택지 / 주차장용지

바로 지금이 기회!!

나주 혁신도시 전문 **나주 솔로몬 공인중개사**

☎ 061-333-7077, H. 010-5587-3080 / 010-3505-8005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리 354-32(우정사업본부 후문 방향)

행복한 부자를 위한 자산관리 전문회사

ASSET KOREA since 2005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부실채권(NPL) 매각

화정동 예식장
대지:1094㎡ 건물:4489㎡
감정가격:41억5천 채권매각:상담시 협의

월출동 공장
대지:광주시소유 건물:2353㎡
감정가격:21억6천 채권매각:상담시 협의

금남로4가 빌딩
대지:800㎡ 건물:4834㎡
감정가격:69억3천 채권매각:상담시 협의

쌍암동 나이트클럽
대지:3238㎡ 건물:3090㎡
감정가격:89억7천 채권매각:상담시 협의

부실채권 매각은 현재 경매진행중이거나 정지중인 물건을 유통화 자산매각 전문회사인 에셋코리아를 통해 선착순 수의계약으로 채권을 매입하는 유용한 제테크 방법입니다.

상담 010-7570-7525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17-1 (1층 굿모닝타운 분당 사무실)

금당공인중개사

매매·교환·설계·시공등의 물건을 구합니다.
투자·감정가 이하

- 충정로5가 버스도로 대지777㎡(235) 공시지가 17억7천천 오피스텔, 상가개발적합 9억6천
- 함평군 영암읍 살리는 여관 대지 320평 건평211평 객실 21실과 함께 있는 2층 주거지 504평 주거지에는 소형 APT나 다세대적합 대출4억 교환도 가능 10억5천
- 월곡·다세대적합지 북동상업지 64평 매도1억6천
- 계림동 구호빌딩 대지 542㎡(164) 건평 1200평 요양시설·병의원·회의실·사무동에 적합 18억
- 대인동 소방도점 상업지역 786㎡(238) 오피스텔·생활주택·다세대적합 9억5천
- 조선대학교앞 동명동 고시원과 주택 및 사무실용 건물4동 대지321평 건물592평 고시원176실 전세5천만원에 월3500만원선 수입예상. 대출9억 임대수익생활에 적합. 소유권 이전은 법인이전 가능함 17억
- 공장부지 나주시 남평읍 비행정도로부근 2192㎡(663)와 주택 매도 2억4천

매도·임대

- 매도. 수기동 상업지역 705㎡(213) 원룸·투룸·쓰리룸 92개허가. 주택가격 12억가능. 투지에 적합 7억4천
- 매도. 신안군 지도읍 아파트. 중도에 슬로시티와 엘도리로 가는 길. 바다가 보이는 별장용APT. 모임이나 회사의 복지시설도 적합. 30평과 41평이 있고 대출은 8천에서 1억가능. 가격은 전세1000만원과 1억8500. 임대도 가능하며 조건은 조정함
- 임대. 신창동 보건대학 부근 주택전시관 1층167㎡(50) 전세5천에 월2000원 임대. 분위기있는 식당도 적합
- 임대·매매. 쌍촌동에 신축중인 기도건설의 기도생활주택 2차 건물 호텔급 시설의 풀옵션 9평형 주택. 입주는 11월 말경. 임대는 전세1000에 월40선. 매매는 6300만원(대출 3천만원 포함)투지지는 여러개를 매입해서 임대하면 수익성이 매우 좋음.

☎ 문의 222-4994, 010-2632-5659
쌍촌동 (구) 기고사 자리, 가도 생활주택 전시관

다와부동산 재테크컨설팅

(주)다와부동산컨설팅부, 매수신청대리업체(법원인가)
근린시설입찰에서 명도, 등기, 양도신고까지(무료상담)

근린시설

- ▷ 동구 지산동 준주거 3층근린 대지241㎡ 건평307㎡ 감정가4억
- ▷ 광산구 쌍암동 일반상업 숙박시설 대지1760㎡ 건평2821㎡ 감정가46억 최저가17억
- ▷ 나주시 송월동 상업지역 6층상가 대지545㎡ 건평2309㎡ 감정가13억 최저가7억

단독주택

- ▷ 북구 장등동 전원주택 대지763㎡ 건평137㎡ 감정가1억8천만
- ▷ 북구 운암동 2층단독주택 대지149㎡ 건평161㎡ 감정가1억 최저가17천만
- ▷ 나주시 남내동 2층주거 2층주택 대지319㎡ 건평297㎡ 감정가12억3천만 최저가1억3천만

공장및창고

- ▷ 북구 대촌동 창고및대지 토지2800㎡ 건물303㎡ 감정가11억 최저가8억
- ▷ 광산구 용동 일반공업 2층공장 토지3305㎡ 건물2711㎡ 감정가130억 최저가17억
- ▷ 강진읍 송덕리 냉동.저온창고 토지33650㎡ 건물11762㎡ 감정가94억 최저가127억

토지매매

- ▷ 동구 내남동 1층주거 전원주택부지 주거환경최상 대지750㎡ 상담후 가격조정
- ▷ 무안군 해미면 덕산리 관리지역 전.임야 3642㎡ 매매3,500만
- ▷ 광산구 지평동 자연복지 대지.전 2115㎡ 매매5천만(조정가)

☎ 문의 010-4911-4989 (팩스 062-226-3607)

영천부동산

상가건물 대지·임야 전원주택·묘지

급히 파실분
부동산을 급히 팔거나, 임대를 원하시면 저희 영천부동산으로 오십시오. 빠른 시일내에 매매·임대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밀보장
매수자·매도자·매도물건에 대하여 비밀보장하여 드립니다.

▶ 전념여고 건너편 ▶

영천공인중개사
010-4610-3763
062)222-5105